

## 아특별 통과 이후의 과제

# 5대 문화권 사업 국비 반영 70%까지 상향해야

〈상〉 조성사업 계획 보완 시급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특별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아시아문화도시법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31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당초 5년마다 수정·보완하게 돼 있는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종합계획 수정) 또한 변화를 반영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성사업 주요 추진체계 혁신을 비롯해 국비 지원 등 재원조달 방안 또한 지역 실정에 맞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의 아특별 개정안 통과에 따른 과제와 필요한 조치들을 세 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은 아특별과 종합계획에 근거한 국책사업이지만 문화전당 건립 외에 다른 분야는 뚜렷한 진전 없

광주시 재정 열악 50대 50 매칭으로 어려움...국책사업 지속성 담보를 추진단장 국장급으로 높여 위상 강화·시민사회 참여와 협치도 꼭 필요

이 담보상태다. 특히 문화전당 효과를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조성사업 전반이 전기를 맞은 점은 의미가 있다. 일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핵심은 조성사업 원래 취지에 부합하고, 추진 방식이나 체계 재정비를 토대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정이행 과제로 문화전당 활성화, 5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조성사업 전반이 전기를 맞은 점은 의미가 있다. 일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핵심은 조성사업 원래 취지에 부합하고, 추진 방식이나 체계 재정비를 토대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지역시민사회는 무엇보다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합계획에 의거해 2019~2023년까지 투입돼야 할 국비는 1조 497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가운데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5대문화권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 매칭으로 광주시 재정자립도,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아특별에 근거해 '필요 시 국비 반영률을 상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70%까지 국비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조성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 위상 강화도 중요한 문제다. 처음 추진단이 꾸러질 당시에는 단장 직급이 차관보였으나 지금은 4급(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에서는 최소한 추진단장을 국장급으로 높여 위상을 강화해야 부처 간 실질적인 협력과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직제와 편제, 인력을 확보해야 국책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또한 가능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시민사회 참여와 협치 또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법과 제도에 근간을 두고 추진되는 국책사업에서 시민 참여 및 협치는 선연적 의미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설립, 광주비엔날레전시장 신축 등 종합계획에 있는 세부 내용 등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광주시, 추진단, 문화전당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제도, 예산 삼박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출발한 국책사업인 만큼 시민사회와 광주시, 정치권, 정부가 협력해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벚꽃 사이로 봄치녀 제~ 오시네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벚꽃 사이로 놀이기구를 타며 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득 몰수·소급 적용

민주당·정부·청와대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이어 "현행 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있다"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 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 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에라도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비공개 내 부정정보를 활용한 투기, 조직적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민 꼬 나잉' 5·18기념재단에 감사·연대 메시지

국회서 '임 행진곡' 이어 부르기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이자 2009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민 꼬 나잉(Min Ko Naing) 씨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어 부르기로 하는 등 미얀마 민주화 지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민 꼬 나잉은 지난 23일 기념재단 측에 서한을 보내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인들이 현행 민주화 혁명의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거기에 바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현재의 미얀마인들은 한국의 5·18민주화운동으로부터 용기와 교훈을 얻어 투쟁에 임하고 있다"고 5·18기념재단과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 세계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연대, 지지, 그리고 도움의 손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를 추진력으로 저희는 승리의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 꼬 나잉씨는 전 미얀마학생연합을 조직해 미얀마 8888항쟁을 촉발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65년형을 선고받는 등 미얀마 군부 탄압의 표적이 된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다. 국회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살상행위를 규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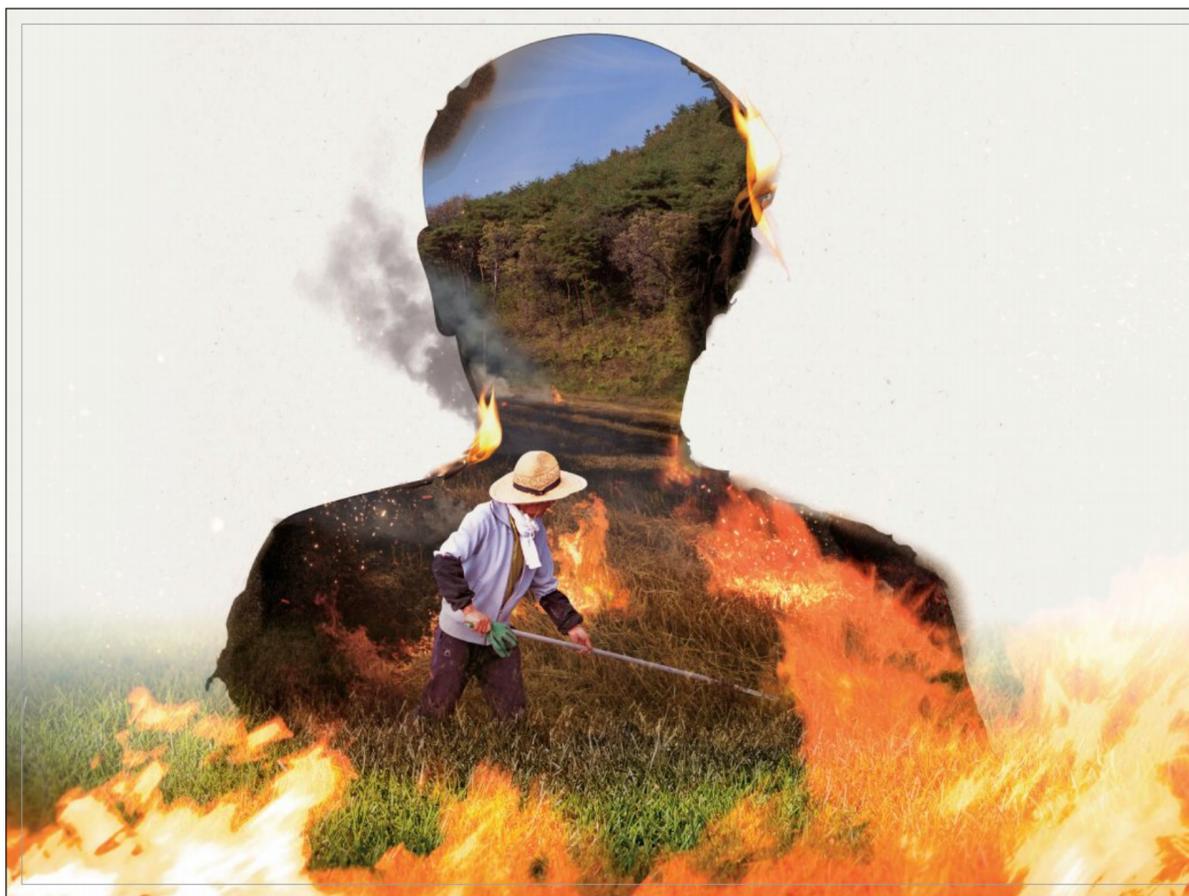
민주화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부르기가 시작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부르기가 시작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시민·작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주문화재단과 마이클은 광주를 중심으로 시민과 작가를 모집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음원 제공부터 영상 편집 등 쉐린지 영상 제작 전반을 총괄한다.

국회의원들이 각자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 영상을 받아 최종 편집해 미얀마어로 자막을 입힌 뒤 SNS에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주부터 여야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현재까지 송영길·이병훈·윤영덕·이용선·조승래·위성곤 의원 등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민 의원은 "지난번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전하는 군부의 잔혹한 폭력을 접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면서 "미얀마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차원에서 5월의 훈이 담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드러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오광록·정병호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정의롭고 용감로운 광주  
광주대한민국  
두, 마레로!

##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논·밭두렁을 태우시나요?  
농촌에서의 불법소각,  
모든 것을 태우는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